

〈2019 국가직 9급 (2019.04.06 시행)〉

<출제 비중>			
제1편 행정학총론	1문항	제5편 재무행정론	3문항
제2편 정책론	4문항	제6편 행정환류론	
제3편 조직론	7문항	제7편 지방행정론	2문항
제4편 인사행정론	2문항		

2019 국가직 9급 행정학은 무난한 난이도로 출제되었다고 봅니다. 대부분 강의와 교재에서 강조한 내용들이 그대로 출제되었습니다. 제대로 공부하였다면 90점 이상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기본적인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가 다수 출제되었고, 기출문제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출제였습니다.

다만, 정답이 명확하지 못한 문제가 있어서(2번 책임운영기관 관련 문제, 6번 정부부처형 공기업 관련 문제)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지는 않지만 암기해두면 정확하고 신속하게 풀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수업시간에 강조한 내용들이 출제되기도 해서

이제 국가직 시험은 끝났습니다. 남아있는 지방직 시험에 집중할 때입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후회 없는 60일을 보내고 반드시 합격의 좋은 결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1] 정책네트워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책네트워크의 참여자는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부문까지 포함한다.
- ②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에 비해서 이슈네트워크(issue network)는 제한된 행위자들이 정책과정에 참여하며 경계의 개방성이 낮은 특성이 있다.
- ③ 헤클로(Heclo)는 하위정부모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정책이슈를 중심으로 유동적이며 개방적인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 현상을 묘사하기 위한 대안적 모형을 제안하였다.
- ④ 하위정부(sub-government)는 선출직 의원, 정부관료, 그리고 이익집단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다.

정답> ②

해설> ② [X] 반대로 되어 있다. 이슈네트워크(issue network)에 비해서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는 제한된 행위자들이 정책과정에 참여하며 경계의 개방성이 낮은 특성이 있다.

정책과정과 네트워크
(1) 정책네트워크 모형은 사회학이나 문화인류학의 연구에서 이용되어 왔던 네트워크 분석을 다양한 참여자들의 행위들로 특징지어지는 정책과정의 연구에 적용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행위자들 간의 관계를 중시한다(정정길). (2) 네트워크 분석에서 행위자들 간의 관계는 자원의존성을 토대로 한 교환관계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행위자들 간의 관계의 밀도와 중심성의 개념을 중심으로 점, 선, 그리고 파라미터 등을 활용하여 네트워크를 표현한다.

(3) 정책네트워크 모형의 기원에 대해서는 미국과 영국에서 차이가 있다.

① 미국의 경우 1960년대의 하위정부 모형과 1970년대 후반의 이슈네트워크 모형을 기원으로 했지만, 영국의 경우 정당과 의회 중심의 정책과정 설명이 한계에 부딪히면서 등장했다.

② 미국에서 헤클로(Heclo, 1978)는 폐쇄적인 상호작용 구조를 다루는 하위정부 모형을 비판하면서 정책이슈를 중심으로 유동적이고 개방적인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 현상을 묘사하기 위해 이슈네트워크 모형을 제안했다. 그에 의하면, 이슈네트워크(issue network)는 정부부처의 고위관료, 의원, 기업가, 로비스트, 학자, 언론인 등을 포함하는, 즉 특정 영역에 이해관계나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 간의 의사소통 네트워크이다.

③ 영국에서는 로즈(Rhodes, 1997)가 정책네트워크의 유형화를 시도했는데, 특히 비교적 폐쇄적이고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정책공동체와 개방적이고 유동적인 이슈네트워크를 대표적인 모형으로 논의하고 있다.

고정모형	하위정부모형(철의 삼각 = 삼자연합) : 정부관료, 의회상임위, 이익집단 (미국)
가변모형 (공동체모형)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 : 전문가 중심의 공동체 (영국)
	이슈공동체(Issue Network) :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미국, 영국)
	인식공동체(Epistemic Community)

▶ 2019 비전행정학 p.304, 306

[2]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상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책임운영기관은 기관장에게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의 특성을 갖는다.
- ② 소속책임운영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총 정원 한도는 총리령으로 정하며, 이 경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부령으로 정한다.
- ③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의 임용시험은 기관장이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④ 기관장의 근무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되, 최소한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정답> ②

해설> ② [X] 소속책임운영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총 정원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이 경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한다.

④ [△] 소속책임운영기관장의 근무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되, 최소한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책임운영기관의 조직 · 인사상 자율성>

조 직	인 사		규 정
소속기관	총정원	→	대통령령
	종류별 · 계급별 정원, 고위공무원단 정원	→	총리령 또는 부령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	직급별 정원	→	기본운영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
제16조(공무원의 정원) ① 소속책임운영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총 정원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정원은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 1. 공무원의 종류별 · 계급별 정원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 ② 기관장은 제1항 각 호의 정원을 정하거나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계획에 관하여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6조(공무원의 정원)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종류별 · 계급별 정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을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책임운영기관 및 그 부속기관의 장의 직위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직위에 부여되는 공무원의 종류와 계급 또는 직무등급(「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배정하는 직무등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소속책임운영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계급별 정원의 범위에서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종류와 정원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 2019 비전행정학 p.585, 589

[3] 「지방자치법」상 주민참여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 ② 19세 이상의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소환할 권리를 갖지만,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는 못하다.
- ④ 주민은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④

해설> ④ [X] 주민은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	
제15조(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①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도와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70분의 1 이하,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連署)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국민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1항에 따른 청구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2.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3.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 2019 비전행정학 p.1274

[4] 나카무라(Nakamura)와 스몰우드(Smallwood)의 정책결정자와 정책집행자의 관계 유형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 정책집행자는 공식적 정책결정자로 하여금 자신이 결정한 정책목표를 받아들이도록 설득 또는 강제할 수 있다.
○ 정책집행자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획득하기 위해 정책결정자와 협상한다.
○ 미국 FBI의 국장직을 수행했던 후버(Hoover) 국장이 대표적인 예이다.

- ① 지시적 위임형
- ② 협상형
- ③ 재량적 실험가형
- ④ 관료적 기업가형

정답> ④

해설> ④ [O] 설문은 관료적 기업가형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Nakamura & Smallwood의 정책집행모형>

	집행자의 재량권 인정 여부			
	추상적 목표	구체적 목표	행정적 수단	기술적 수단
고전적 기술관료형	×	×	×	○
지시적 위임가형	×	×	○	○
협상자형	협상결과에 따라 역할이 결정			
재량적 실험가형	×	○	○	○
관료적 기업가형	○	○	○	○

관료적 기업가(혁신가)형(Bureaucratic Entrepreneur)

정책집행자가 정책결정자의 결정권을 장악하고 정책과정 전반을 완전히 통제하는 유형이다. Nakamura & Smallwood는 고전적 기술관료형을 정책결정자가 가장 강력하게 집행자를 통제하는 유형으로 제시하고 그 정반대의 유형으로 관료적 기업가형을 제시하고 있다. 이 유형의 전제조건 및 특징은 다음과 같다.

- (1) 정책집행자가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공식적인 정책결정자를 설득 또는 강제하여 이 정책목표를 받아들이도록 한다. 설득 · 강제가 필요한 이유는 형식적 · 공식적인 결정권은 정책결정자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 (2) 정책집행자는 정책목표 달성에 필요한 정책수단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책결정자와 협상 · 흥정을 한다.
- (3) 정책집행자는 자신들의 정책목표를 성실하게 성취하려고 노력한다.
- (4) 정책결정자에서 정책집행자으로의 권력이동이 일어난다. 개별적 집행자들이 기업가적이고 정치적인 재능을 발휘해서 정책과정을 지배한다.
- (5) 모든 실권을 집행자가 장악하고 있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 2019 비전행정학 p.405

[5] 공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국가공무원법」은 제1조에서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공익을 추구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 ② 「공무원 헌장」은 공무원이 실천해야 하는 가치로 공익을 명시하고 있다.
- ③ 신공공서비스론에서는 공익을 행정의 목적이 아닌 부산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 ④ 공익에 대한 실체설에서는 공익을 사익 간 타협 또는 집단 간 상호작용의 산물로 본다.

정답> ②

해설> ② [O] 「공무원 헌장」은 공무원이 실천해야 하는 가치로 공익을 명시하고 있다.

「공무원 헌장」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다. 우리는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실현하며 국가에 헌신하고 국민에게 봉사한다. 우리는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추구하고 조국의 평화 통일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 이에 굳은 각오와 다짐으로 다음을 실천한다. 하나. 공익을 우선시하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한다. 하나.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하나.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 행정을 구현한다. 하나. 청렴을 생활화하고 규범과 건전한 상식에 따라 행동한다.

- ① [X] 「국가공무원법」의 어디에도 공익이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국가공무원법」 관련 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그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국가공무원에게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③ [X] 신공공서비스론(NPS)에서는 공익을 행정의 부산물이 아닌 목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

을 강조한다.

④ [X] 공익을 사익 간 타협 또는 집단 간 상호작용의 산물로 보는 것은 공익에 대한 과정설이다.

▶ 2019 비전행정학 p.901

[6] 공공서비스의 공급 주체 중 정부 부처 행태의 공기업에 해당하는 것은?

- ① 한국철도공사
- ② 한국소비자원
- ③ 국립중앙극장
- ④ 한국연구재단

정답> ③ (또는 정답 없음)

해설> 정부부처형 공기업은 '형태상 일반행정부처와 동일한 형태를 띠는 공기업'으로 실정법상 정부기업이라고 한다. 정부부처형 공기업(정부기업)에는 우편사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우체국예금사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조달사업(조달청) · 양곡관리사업(농림축산식품부)이 있다. 그리고 책임운영기관 중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도 정부기업으로 간주된다.

③ [△] 국립중앙극장은 책임운영기관이다. 다만, 특별회계기관이 아니라 일반회계기관에 속한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정부부처형 공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X] 한국철도공사는 공공기관 중 준시장형 공기업에 해당한다.

② [X] 한국소비자원은 공공기관 중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에 해당한다.

④ [X] 한국연구재단은 공공기관 중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에 해당한다.

<책임운영기관의 회계 구분>

일반회계(36)	국립국제교육원, 통일교육원, 국방홍보원, 국방전산정보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국립중앙극장, 국립현대미술관, 한국정책방송원, 한국농수산대학, 국립중자원,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국토지리정보원, 항공교통본부,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국립해양측위정보원, 국제상담센터, 관세국경관리연수원, 통계개발원, 경인지방통계청, 동북지방통계청, 호남지방통계청, 동남지방통계청, 충청지방통계청,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공능유적본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 항공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 해양경찰정비창
특별회계(13)	국립중앙과학관, 국립과천과학관,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나주병원, 국립부곡병원, 국립춘천병원, 국립공주병원, 국립마산병원, 국립목포병원, 국립재활원, 경찰병원,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u>특허청</u>

▶ 2019 비전행정학 p.571, 586, 588

[7] 앨리슨(Allison)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합리적 행위자 모형에서는 국가전체의 이익과 국가목표 추구를 위해서 개인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 것을 경계하며 국가가 단일적인 결정자임을 부정한다.

② 조직과정모형에서 조직은 불확실성을 회피하기 위하여 정책결정을 할 때 표준운영절차(SOP)나 프로그램 목록(program repertory)에 의존하지 않는다.

③ 관료정치모형은 여러 다양한 문제에 관심을 갖는 다수의 행위자를 상정하며 이들의 목표는 일관되지 않는다.

④ 외교안보문제 분석에 있어서 설명력을 높이기 위한 대안적 모형으로 조직과정모형을 고려하지는 않는다.

정답> ③

해설> 앨리슨(Allison)은 쿠바 미사일 위기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합리적 행위자모형, 조직과정 모형, 관료정치모형이라는 3가지 정책결정모형을 제시하였다.

③ [O] 관료정치모형(Model III)은 여러 다양한 문제에 관심을 갖는 다수의 행위자를 상정하며 이들의 목표는 일관되지 않는다.

① [X] 합리적 행위자 모형(Model I)에서는 국가전체의 이익과 국가목표 추구를 위해서 개인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 것을 전제하며 국가가 단일적인 결정자임을 인정한다.

② [X] 조직과정모형(Model II)에서 조직은 불확실성을 회피하기 위하여 정책결정을 할 때 표준운영절차(SOP)나 프로그램 목록(program repertory)에 의존한다.

④ [X] 외교안보문제 분석에 있어서 설명력을 높이기 위한 대안적 모형으로 조직과정모형(Model II)을 고려한다.

<앨리슨(Allison)의 정책결정 모형>

구 분	합리모형(Model I)	조직(과정)모형(Model II)	관료정치모형(Model III)
① 조직관 (정책결정주체)	조정과 통제가 잘 되는 유기체	느슨하게 연결된 하위조직의 연합체	독립적인 개인적 행위자들의 집합체
② 권력의 소재	조직의 두뇌와 같은 최고 지도자	반독립적인 하위조직이 분산소유	개인적 행위자들의 정치적 자원에 의존
③ 행위자의 목표	조직전체의 목표	조직전체의 목표 + 하위조직의 목표	조직전체목표 + 하위조직목표 + 개별행위자목표
④ 정책결정의 양태	최고지도자가 조직의 두뇌와 같이 명령하고 지시	SOP에 의한 프로그램목록에서 대안 추출	정치적 게임 규칙에 따라 타협·협정
⑤ 정책결정의 일관성	매우 강하여 항상 일관성 유지	약하여 자주 바뀜	매우 약하여 거의 일치하지 않음
⑥ 목표의 공유도	매우 강함	약함	매우 약함

▶ 2019 비전행정학 p.352

[8] 정부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포지티브(positive) 규제가 네거티브(negative) 규제보다 자율성을 더 보장해준다.
 ㄴ. 환경규제와 산업재해규제는 사회규제의 성격이 강하다.
 ㄷ. 공동규제는 정부로부터 위임을 받은 민간집단에 의해 이뤄지는 규제를 의미한다.
 ㄹ. 수단규제는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이나 행위에 대해 사전적으로 규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정답> ④

해설> ④ [O] ㄴ, ㄷ, ㄹ은 옳은 내용이고, ㄱ은 옳지 못한 내용이다.

ㄱ. [X] 네거티브(negative) 규제가 포지티브(positive) 규제보다 자율성을 더 보장해준다. 네거티브 규제는 '원칙 허용', '예외 금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것 이외에는 모든 것을 자유로이 할 수 있다.

ㄴ. [O] 사회적 규제의 사례에는 환경규제와 산업재해규제 등이 있다.

ㄷ. [O] 공동규제는 정부로부터 위임을 받은 민간집단에 의해 이뤄지는 규제를 의미한다. 직접 규제와 자율규제의 중간 형태이다.

ㄹ. [O] 수단규제는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이나 행위에 대해 사전적으로 규제하는 것'이다. 투입규제라고도 한다.

네거티브 규제와 포지티브 규제(규제의 개입 범위에 따른 구분)
규제는 개입의 범위에 따라 네거티브 규제와 포지티브 규제로 구분된다. (1) 네거티브 규제 ① 네거티브 규제는 '원칙 허용', '예외 금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할 수 없다', 혹은 '∼가 아니다'의 형식을 띤다. ② 네거티브 규제 방식에서는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것 이외에는 모든 것을 자유로이 할 수 있다. (2) 포지티브 규제 ① 포지티브 규제는 '원칙 금지', '예외 허용'의 형태를 띤 방식으로 '∼할 수 있다' 혹은 '∼이다'의 형식을 띤다. ② 따라서 포지티브 규제에서는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행위가 금지된다. (3) 비 교 ① 네거티브 규제가 포지티브 규제에 비해 피규제자의 자율성을 더 보장해준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② 예를 들어, 동일한 규제라 하더라도 '대기업은 프랜차이즈 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와 '대기업은 프랜차이즈 사업에 진출할 수 있다'는 그 효과에서는 완전히 다르다. 전자와 같이 <u>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설계를 하게 되면 대기업은 프랜차이즈 사업 이외에는 다른 모든 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되지만, 후자와 같이 포지티브 방식으로 규제설계를 하면 대기업은 프랜차이즈 사업만 할 수 있고 그 밖의 사업에는 진출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u> 당연히 전자와 같은 네거티브 규제가 포지티브 규제보다 피규제자에 더 많은 자율성을 보장해준다.

규제 대상에 따른 규제의 유형(새행정학2.0)
규제는 동일한 사회문제 해결에 대해서도 해결할 수단, 관리 방식, 최종 성과를 대상으로 설계될 수 있는데, 이들을 각각 수단규제, 관리규제, 성과규제로 일컫는다. (1) 수단규제 ① 수단규제는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이나 행위에 대해 사전적으로 규제하는

것'이다. 수단규제를 투입규제라고도 한다.

②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에 특정한 유형의 환경통제 기술을 사용할 것을 요구하는 것, 작업장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안전장비를 착용하게 하는 것과 같은 투입 수단의 채택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③ 수단규제는 정부의 규제 정도와 피규제자의 순응 정도를 파악하는 데 용이하다. 규제가 요구한 환경통제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지, 사용하고 있다면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를 측정하고 확인하면 되기 때문이다.

(2) 성과규제

① 성과규제는 '정부가 특정한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목표 달성 수준을 정하고 피규제자에게 이를 달성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②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공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라는 것, 인체 건강을 위해 개발된 신약에 허용 가능한 부작용 발생 수준을 요구하는 것이 대표적인 성과규제다.

③ 성과규제는 규제가 의도한 최종 산출물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산출규제라고도 한다.

④ 성과규제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성과 기준만 충족하면 되기 때문에 이를 달성하는 수단과 방법의 선택은 피규제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수단규제에서 성과 기준 달성을 위한 특정 수단의 채택을 요구하는 것과는 상반된다.

⑤ 성과규제는 사회경제적으로 바람직한 최적의 성과 수준을 찾는 것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대기오염 방지에 최적의 이산화탄소 농도, 인체 건강에 무해한 신약의 부작용 수준을 과학적으로 계산해 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3) 관리규제

① 관리규제는 '수단과 성과가 아닌 과정을 규제하는 것'이다. 관리규제에서 정부는 피규제자가 만든 규제 목표 달성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그 이행을 요구한다.

② 대표적인 예로는 식품안전을 위해 그 효용이 부각되는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s : HACCP)이 있다. 이것은 정부가 피규제자인 식품업체에게 식품의 원재료 생산에서부터 제조, 가공, 보존, 유통 단계를 거쳐 최종 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의 각 단계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해 요소를 규명하고 중요 관리점을 결정해 체계적인 위생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③ 관리규제는 수단규제와 성과규제가 갖는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규제 방식이기도 하다. 관리규제가 수단규제보다 나은 점은 피규제자에게 많은 자율성을 준다는 점이다. 즉, 피규제자에게 스스로 비용 효과적인 규제를 설계하도록 한다. 그 결과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정해지는 수단규제에 비해 피규제자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유연한 규제설계가 가능해질 수 있다. 또한 관리규제는 성과 달성 정도를 정하고 이를 확인해야 하는 성과규제를 적용하기 어려울 때 적합하다. 관리규제에서 정부는 성과 달성 여부나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피규제자 스스로 설계한 규제가 구체적인 상황에 적합하며 잘 집행되고 있는가를 평가하기 때문이다.

▶ 2019 비전행정학 p.224, 220

[9]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상 정책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부업무평가지행계획에 기초하여 자체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무총리는 2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관련 시책, 주요 현안시책, 혁신관리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부문에 대하여 특정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이 행하는 정책은 정부업무평가의 대상에 포함

된다.

④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정답> ④

해설> ④ [X] 정부업무평가의 실시와 평가기반의 구축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하에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2인(국무총리와 민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기획재정부장관·국무조정실장과 이외에 대통령이 위촉하는 민간위원들로 구성된다.

<정부업무평가의 종류>

중앙행정기관 평가	자체평가	중앙행정기관장
	재평가	국무총리
	특정평가	국무총리
지방자치단체 평가	자체평가	지방자치단체장
	합동평가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함께
공공기관 평가	외부평가가 원칙	

▶ 2019 비전행정학 p.438

[10] 지방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이승만 정부에서 처음으로 시·읍·면 의회의원을 뽑는 지방선거가 실시되었다.
- ② 박정희 정부부터 노태우 정부 시기까지는 지방선거가 실시되지 않았다.
- ③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을 동시에 뽑는 선거는 김대중 정부에서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 ④ 2010년 지방선거부터 정당공천제가 기초지방의원까지 확대되었지만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현재는 실시되지 않고 있다.

정답> ①

해설> ① [O] 제1공화국 이승만 정부에서 처음으로 시·읍·면 의회의원을 뽑는 지방선거가 실시되었다(1952).

② [X] 박정희 정부부터 전두환 정부 시기까지는 지방선거가 실시되지 않았다. 노태우 정부에서 기초의원 선거는 1991년 3월에, 광역의원 선거는 1991년 6월에 실시되었다.

③ [X]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을 동시에 뽑는 선거는 김영삼 정부에서 처음으로 실시되었다(1995).

④ [X] 2010년 지방선거부터 정당공천제가 기초지방의원까지 확대되어 현재 실시되고 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연혁>

시 기		내 용
지방 자치 의 원류	고려시대	사심관(事審官, 건국공신에 의한 출신지방 통치), 향직(鄉職)단체(지방세력가에 의한 자치)
	조선시대	향청(鄉聽, 지방세력가들의 단체로서 중앙에 지방의견을 전달), 향약(鄉約, 지방세력가 중심의 자발적·자치적 교화운동),

		면·동·리(面·洞·里, 주민 스스로 구성된 행정단위)
근대 지방 자치 의 생성	갑오경장기	지방재정의 제도적 근거 마련, 행정구역 장의 권한에서 군사·사법·경찰권 제외, 향회(鄉會, 오늘날의 지방의회, 주민이 참여·의결, 한일합방으로 폐지)
	일제치하	· 1913년 : 군·면·리의 명칭 및 규모가 오늘날까지 이어져옴, 부(府)에 최초로 법인격 부여 · 1930년 : 도와 읍이 공법인화, 의결기관인 도회(道會)·부회(府會)·읍회(邑會) 설치(미군정기에 폐지), 자문기관인 면협의회 설치
	미군정기 (‘45~‘48)	서울시를 경기도 관할에서 분리하고 도와 동격인 서울특별시로 개칭, 제주도를 전라남도에서 분리하고 도로 승격, 도회(道會)·부회(府會)·읍회(邑會)를 해산, 교육구와 교육위원회를 설치
제1공화국 (‘48~‘60)		- 불완전한 지방자치 ① ‘49.7. 지방자치법 제정 : 기관대립주의, 서울특별시장과 도시자는 임명제, 시·읍·면장은 의회에서 간선제 채택, 단체장 불신임권과 의회해산권 인정 ② ‘49.12. 개정 : 지방의원 제명 규정, 시·읍·면장에 대한 탄핵소추 신설 ③ ‘52 지방의회의 구성 : 기초·광역의회 의원 최초 선거 ④ ‘56.2. 개정 : 시·읍·면장의 직선제 전환, 자치단체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제도 폐지 ⑤ ‘56.8. 총선거 실시 : 제2대 지방의원 및 제1대 자치단체장(시·읍·면장) 선거 ⑥ ‘58.12. 관치적 개정 : 시·읍·면장 임명제와 불신임제 채택, 의장단 불신임제 폐지
제2공화국 (‘60~‘61)		- 지방자치의 전면 실시 ① ‘60 총선거(서울특별시·도지사·시·읍·면장의 직선제 전환과 총선거) : 주민 직선에 의해 제3대 지방의원, 제2대 시·읍·면장, 제1대 서울특별시장과 도지사 선거에 의해 기관구성 완료 ② ‘60.11. 개정 : 단체장 직선제 도입, 시·읍·면장 불신임제 폐지, 의장과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제 채택 ③ 제2공화국의 단명과 함께 지방자치의 중단
제3공화국 (‘61~‘72)		- 지방자치의 중단기 ① ‘61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정 : 이 법에 저촉되는 지방자치법 규정의 효력 정지 ② 중앙집권체제로 회귀 : 지방의회 해산, 자치단체장 임명
제4공화국 (‘72~‘80)		- 지방자치의 유예 ① ‘72 유신헌법(부칙) : 지방의회 구성을 조국통일시까지 유예 ② ‘73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의 개정 : 지방자치단체조합과 행정협의회 설치 근거 규정
제5공화국 (‘81~‘88)		- 지방자치 유예의 완화, 민주화[6·29 선언(‘87)] ① 제5공화국 헌법(부칙) : 지방의회의 구성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구성하되, 그 시기는 법률로 정하도록 부칙에 규정(단, 법률 미제정) ② ‘88 지방자치법 개정 : 2계층화[광역(특별시·광역시·도)-기초(시·군·자치구)]
제6공화국 : 지방자치 의 본격 전개	노태우 정부 (~88)	① ‘88 지방자치법 전문개정 : 지방의회의 행정사무조사권 신설, 지방선거법 분리 제정, 주민소청제 폐지 ② ‘91 총선거 실시(1961년 지방의회가 해산된 지 30년만에 총선거 실시) : 기초의원(3월), 광역의원(6월) 선거
	김영삼 정부 (~98)	① ‘94.3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정 : 모든 공직선거를 통합하는 통일법 제정(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원, 자치단체장 선거) ② ‘94.3. 지방자치법 개정 : 주민투표제도 규정, 분청조정위원회 설치, 조례 위반에 대한 형벌규정 삭제하고 대신 과태료 부과권 인정 ③ ‘94.12. 지방자치법 개정 : 자치단체장의 겸직 제한 및 연임 제한 ④ ‘95.6. 동시지방선거 실시 : 기초·광역 의회위원 및 장에 대한 4대 동시선거
	김대중 정부 (~00)	① ‘99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 등에 관한 법률(지방이양촉진법) 제정 ② ‘99 지방자치법 개정 : 조례 제정 및 폐제청구권과 주민감사청구권 규정
	노무현 정부 (~08)	① ‘04 주민투표법 제정 ② ‘05 지방자치법 개정(2006.1 시행) : 주민감사청구제 요건 완화, 주민소송제 도입, 지방의원의 유급직 전환, 지방채 발행 근거 마련, 주민소환제 근거 규정(‘07.5.25 시행) ③ ‘05 공직선거법 개정 : 선거 연령을 19세로 하향 조정, 외국인에 대한 지방선거권 부여,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도입, 기초의원 선거시 중선거구제 및 비례대표제 도입 ④ ‘06 지방자치법 개정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조례의 제정·개폐 요건 완화 및 청구권자 연령을 19세로 하향 조정, 의원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 제정, 최초 임시회를 지방의회에서 소집하도록 규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정(‘06.5)
	이명박 정부	· ‘09. 4. 지방자치법 개정 : 거주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주민참여권 확대(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권 부여), 행정면 도입,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및 영리행

	(’08~)	위 제한 강화
--	--------	---------

▶ 2019 비전행정학 p.1273 / 2019 비전 Sub-Note p.218

[11]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조직의 인간관은?

- 인간을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행동하는 존재로 본다.
- 인간은 조직에 의해 통제 · 동기화되는 수동적 존재이며, 조직은 인간의 감정과 같은 주관적 요소를 통제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

- ① 합리적 · 경제적 인간관
- ② 사회적 인간관
- ③ 자아실현적 인간관
- ④ 복잡한 인간관

정답> ①

해설> ① [O] 설문은 고전적 조직이론의 인간관인 합리적 · 경제적 인간관에 관한 내용이다.

▶ 2019 비전행정학 p.481

[12] 근무성적평정에서 나타나기 쉬운 집중화 경향과 관대화 경향을 시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자기평정법
- ② 목표관리제 평정법
- ③ 중요사건기록법
- ④ 강제배분법

정답> ④

해설> ④ [O] 강제배분법은 ‘평정등급별로 분포비율을 강제로 분산시키는 방법’으로 도표식 평정척도법에서 흔히 나타나는 집중화 경향이나 관대화 경향을 막기 위한 것이다.

▶ 2019 비전행정학 p.819

[13] 정부가 동원하는 공공재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세로 투자된 자본시설은 개인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어 과다 수요 혹은 과다 지출되는 비효율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② 수익자부담금은 시장기구와 유사한 매커니즘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최적 수준을 지향하여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 ③ 국공채는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사업이나 시설로 인해 편익을 얻게 될 경우 후세대도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세대 간 형평성을 훼손시킨다.
- ④ 조세의 경우 납세자인 국민들은 정부지출을 통제하고 성과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답> ③

해설> ③ [X] 국공채는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사업이나 시설로 인해 편익을 얻게 될 경우 후세대도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시킨다.

▶ 2019 비전행정학 p.1013

[14] 정부의 위원회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결정에 대한 책임의 공유와 분산이 특징이다.
- ② 복수인으로 구성된 합의형 조직의 한 형태다.
-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의사결정의 권한이 없는 자문위원회에 해당된다.
- ④ 소청심사위원회는 행정관청적 성격을 지닌 행정위원회에 해당된다.

정답> ③

해설> ③ [X] 국민권익위원회는 의사결정의 권한이 있는 행정위원회에 해당된다. 행정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관청으로서, 의사결정의 구속력과 집행권을 모두 가진다. 경우에 따라서는 준입법권과 준사법권도 보유한다. 행정위원회에는 소청심사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중앙국세심사위원회, 해양안전심판원 등이 있다.

▶ 2019 비전행정학 p.566

[15] 리더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특성론에 대한 비판은 지도자의 자질이 집단의 특성 · 조직목표 · 상황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고, 동일한 자질을 갖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갖춰야 할 보편적인 자질은 없다는 것이다.
- ② 행태이론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능력 등 리더가 갖춘 속성보다 리더가 실제 어떤 행동을 하는가에 초점을 맞춘다.
- ③ 상황론에서는 리더십을 특정한 맥락 속에서 발휘되는 것으로 파악해, 상황 유형별로 효율적인 리더의 행태를 찾아내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 ④ 번스(Burns)의 리더십이론에서 거래적 리더십은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기반으로 하므로 카리스마적 리더십과 중첩되는 측면이 있다.

정답> ④

해설> ④ [X] 번스(Burns)의 리더십이론에서 변혁적 리더십은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기반으로 하므로 카리스마적 리더십과 중첩되는 측면이 있다.

<리더십이론의 변천>

자질론 (속성론)	1940~1950년대	· 리더십의 본질을 리더의 자질이나 속성(Traits)으로 이해 · 전통적인 연구(리더의 자질, 속성 규명)
행동유형론 (행태론적 접근)	1950~1960년대	· 리더의 행동유형에 따라 리더십의 효과성이 달라진다는 이론(리더행동의 다양성과 차별성 규명) · 아이오와 대학(Lippitt & White)의 연구, 미시간 대학의 연구, 오하이오 대학의 연구, Blake & Mouton의 연구(관리망이론) 등
상황론적 리더십	1970년대~	· 조직의 상황에 따라 리더십의 효율성은 달라진다는 이론, 리더십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조건 규명(자질론과 상황론을 종합)

		한 상호작용론도 넓게 보면 여기에 속함, 3차원이론도 이에 포함) · Fiedler의 상황적응론, Reddin의 3차원 모형(효과성 리더십 이론), House의 경로-목표 모형, Hersey & Blanchard의 3차원 모형(생애 주기이론) 등
도덕적 리더십 (신자질론)	1980년대~	· 리더의 도덕성이나 카리스마 등 리더의 자질이 다시 리더십의 중요한 인자로 인식되는 현대적 리더십연구 · '80년대 이후의 변혁적 리더십, 카리스마적 리더십, 문화적 리더십 등

변혁적 리더십의 특징	
(1) 카리스마적 리더십	카리스마를 지닌 리더는 임무에 대한 비전과 감각을 제공하고, 구성원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으며, 존경과 신뢰를 확보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높은 기대감과 확신을 보임으로써 동기를 유발시킨다. 리더가 난관을 극복하고 현상에 대한 각성을 확고하게 표명함으로써 부하에게 자긍심과 신념을 심어 준다.
(2) 영감적 리더십	교환에 의한 보상보다는 노력을 집중시키기 위해 상징을 이용하고, 중요한 목적을 간단명료하게 표현하여 높은 기대치를 상호 공유함으로써 부하들을 격려한다. 리더가 부하로 하여금 도전적 목표와 임무, 미래에 대한 비전을 열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계속 추구하도록 격려한다.
(3) 촉매적 리더십	부하로 하여금 형식적 관행을 타파하고 창조적 사고와 학습의지 그리고 새로운 관념을 촉발시키는 지적 자극을 부여한다.
(4) 개별적 배려	개인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적절하게 고려함은 물론, 부하들의 개인적인 문제에도 관심을 가짐으로써 부하들의 개인적 성장을 도와준다. 리더가 부하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부하의 특정한 요구를 이해함으로써 부하에 대해 개인적으로 존중한다는 것을 전달한다.
(5) 지적 자극	기존의 문제해결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아이디어의 도입으로 도전의식을 이끌어내고, 문제를 새로운 각도에서 바라보게 한다.
(6) 조직의 생존과 적응의 중시	외부로부터의 자원 확보 등 조직의 생존과 적응을 위한 전략적 선택을 중시한다.
(7) 변화지향적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는 변동추구적 · 개방체제적 리더십이다.

▶ 2019 비전행정학 p.621, 623

[16] 동기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매슬로우(Maslow)는 충족된 욕구는 동기부여의 역할이 약화되고 그 다음 단계의 욕구가 새로운 동기 요인이 된다고 하였다.
- ② 앨더퍼(Alderfer)는 매슬로우의 5단계 욕구이론을 수정해서 인간의 욕구를 3단계로 나누었

다.

③ 허즈버그(Herzberg)는 불만요인(위생요인)을 없앴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만족감을 느끼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④ 브룸(Vroom)의 기대이론에서 수단성(instrumentality)은 특정한 결과에 대한 선호의 강도를 의미한다.

정답> ④

해설> ④ [X] 브룸(Vroom)의 기대이론에서 특정한 결과에 대한 선호의 강도를 의미하는 것은 유의성(valence)이다.

▶ 2019 비전행정학 p.499

[17] 공무원의 근무방식과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유연근무제는 공무원의 근무방식과 형태를 개인 · 업무 · 기관 특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제도이다.

② 시간선택제 근무는 통상적인 전일제 근무시간(주 40시간)보다 길거나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제도이다.

③ 탄력근무제는 전일제 근무시간을 지키되 근무시간, 근무일수를 자율 조정할 수 있는 제도이다.

④ 원격근무제는 직장 이외의 장소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이다.

정답> ②

해설> ② [X] 시간선택제 근무는 통상적인 전일제 근무시간(주 40시간)보다 짧은 시간(긴 시간 X)을 근무하는 제도이다.

유연근무제의 종류
(1) 원격근무제 ① 재택근무형 - 가정에서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업무처리 및 결재를 하는 유형을 말한다. ② 스마트워크형 - 주거지 근처 원격근무사무실(smart office)에서 인터넷망을 통해 사무를 처리하는 유형을 말한다. (2) 탄력근무제 필수근무시간대(10:00~16:00)를 제외하고는 출퇴근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3) 압축근무제 주 40시간 근무를 주 3~4일로 압축하여 근무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4) 시간선택제근무제(시간선택제 전환근무제) 주 20±5시간 근무하고 근무시간비율에 따라 보수를 받으며 신분을 보장받는 경우를 말한다.

▶ 2019 비전행정학 p.668 / 2019 비전 Sub-Note p.126

[18]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교육훈련 방법은?

서로 모르는 사람 10명 내외로 소집단을 만들어 허심탄회하게 자신의 느낌을 말하고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귀담아듣는 방법으로 훈련을 진행하기 위한 전문가의 역할이 요구된다.

- ① 역할연기
- ② 직무순환
- ③ 감수성 훈련
- ④ 프로그램화 학습

정답> ③

해설> ③ [O] 설문은 감수성 훈련에 관련된 설명이다. 감수성 훈련(Sensitivity Training)은 '외부환경으로부터 차단된 상황에서 10명 내외의 낯선 구성원들로 구성된 소집단이 비정형적 접촉에 의한 인간관계 체험에 의하여 타인을 이해하고 스스로 자신의 태도를 평가하고 개선하며 대인적인 자각과 수용능력을 제고하는 훈련'을 말한다. 참여자의 경험과 감성을 중시하므로 감수성 훈련이라고 하며, 외부환경과 격리된 상황에서 실시되기 때문에 실험실 훈련이라고도 하고, 하나의 소규모 훈련팀을 구성하기 때문에 소집단 훈련(Training Group, T-Group)이라고도 한다.

▶ 2019 비전행정학 p.724

[19] 품목별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지출을 통제하고 공무원들로 하여금 회계적 책임을 쉽게 확보 할 수 있는 데 용이하다.
- ② 미국 케네디 행정부의 국방장관인 맥나마라(McNamara)가 국방부에 최초로 도입하였다.
- ③ 거리 청소, 노면 보수 등과 같이 활동 단위를 중심으로 예산재원을 배분한다.
- ④ 능률적인 관리를 위하여 구성원의 참여를 촉진한다는 점에서는 목표에 의한 관리(MBO)와 비슷하다.

정답> ①

해설> ① [O] 품목별 예산제도(LIBS)는 지출대상(품목)별로 금액이 표시되기 때문에 재정적 한계와 공무원의 회계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재정민주주의에 입각한 재정통제라는 근대예산제도의 원칙에 가장 충실한 예산제도라고 할 수 있다.

- ② [X] 미국 케네디 행정부의 국방장관인 맥나마라(McNamara)가 국방부에 최초로 도입한 것은 계획예산(PPBS)이다.
- ③ [X] 거리 청소, 노면 보수 등과 같이 활동 단위를 중심으로 예산재원을 배분하는 것은 성과주의예산(PBS)이다.
- ④ [X] 품목별 예산제도(LIBS)는 예산의 집행에 대한 회계책임을 명백히 하고 경비사용의 적정한 통제를 기하기 위한 통제지향의 예산제도이다. 따라서 상관과 부하가 함께 참여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활동을 하면서 평가와 환류를 중시하는 목표관리예산제도(MBO)와는 성격이 다르다.

▶ 2019 비전행정학 p.991

[20] 예산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예산의 재배정은 행정부처의 장이 실무부서에게 지출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 ② 예산의 전용을 위해서 정부 부처는 미리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예비비는 공무원 인건비 인상을 위한 인건비 충당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④ 사고이월은 집행과정에서 재해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로 이월된 경비를 말한다.

정답> ②

해설> ② [X] 예산의 전용(轉用)에는 국회의 승인이 필요 없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예산의 이용(移用) 전용(轉用)>

구 분		이용(移用)	전용(轉用)
공통점		① 예산 한정성 원칙의 예외(특히 목적 외 사용 금지의 원칙의 예외) ② 사후에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차이점	내 용	입법과목(장, 관, 항) 간의 상호용통(사업 내용 · 규모의 변경)	행정과목(세항, 목) 간의 상호용통(동일한 사업에 관한 지출 대상의 변경)
	국회 의결	필요(국회의 의결을 얻은 후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	불필요(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

「국가재정법」 관련 규정

제46조(예산의 전용)

-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간의 유사성이 있는지,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지,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충당을 위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계연도마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자체적으로 전용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
 - 1.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 2.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용의 승인을 한 때에는 그 전용명세서를 그 중앙관서의 장 및 감사원에 각각 송부하여야 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용을 한 때에는 전용을 한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명시한 명세서를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에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 ⑤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전용을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전용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⑥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이를 명백히 하고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한국고시학원 행정학 심철수

▶ 2019 비전행정학 p.1049